

더민주, 여권 압박 정국 주도 노린다

20대 국회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 예상...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향해 집중 포화나설 듯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겨냥한 압박을 시작할 태세다. 여소야대 국회의 첫 출발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한 공격에서 지난 19대 국회와 판이하게 달랐던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사실 더민주의 임기 개시일인 이달 30일을 앞두고 일찌감치 대공세 수위를 높여 전초전을 치른 바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입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태도를 지켜본 것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민의당과 공조하며 13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입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답해 협치 가능성에 무게를 실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보훈처는 제창을 허용하지 않았다.

여권의 뜻대로 입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공세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은 생긴 셈이다.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인데도 여전히 예전처럼 국정운영을 일방통행 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 문제가 터졌다. 여야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론했고 새누리당도 정 의장과 더민주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로써 협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지적마저 나왔다.

더민주 입장에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대공세에 나서더라도 '발목 잡는 거대 야당'이란 지적은 어느 정도 피할만한 여건이 성숙된 셈이다. 이에 더민주의 국회 개원과 함께 바로 청와대와 여당이 꺼리는 내용의 입법을 재추진하는 등 거대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데 전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는 사안별로 공조를 하며 공동전선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실탄도 두둑하다. 더민주의 가슴이 살균



최경환과의 회동은 어땠습니까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앞에서 열린 경비중대 격려 방문을 마치고 비박계인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의과의 회동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제 피해 문제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대한 민국어비어연합 지원 의혹,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문제, 세월호특별법 개정,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다양한 카드를 꺼내며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발점은 7월 세월호 인양에 즈음해 세월호특별법 재개정을 위한 청문회다. 여기서 더민주의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열 방침이다.

또 가을에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국민의당과 함께 과반수 야당의 위력을 본격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올 하반기 정국은 여권 갈등이 뜨겁게 내년 대선을 앞둔 기선제압 차원의 이벤트들로 점철될 공산이 크다.

다만 압축도 있다. 지나친 대공세는 자칫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새누리당 내부의 균열을 봉합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더민주 내부 사정도 위험 요인 중 하나다. 8~9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친노·친문세력에 대항하는 비주류의 결집이 이뤄지며 당내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더민주를 바라보는 여론이 악화되고 대공세에 예봉이 꺾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 역시 다루기 조심스러운 문제다. 국민의당은 대공세의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놓고 다툰 잠재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향후 다양한 국면에서 두 야당의 공조를 통해 국민의당 존재감만 부각시킬 경우 '남 좋은 일'만 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정의와 국회의장과 순환구 전 더민주 상임고문 등이 중심이 된 정계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국민의당이 여기에 가세하면 더민주의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당 관계자는 20대 국회 전망에 대해 "대여 강공이란 표현보다는 책임감 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한다"는 게 맞다며 "야당이 했던 주장 중에 합당한 주장이 많으니 이를 보다 분명하게 강조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듭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성주 기자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안 수정·의결 도의회 교육위, 일반학급 줄이고 특수 늘려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익산지역 공립단설유치원(가칭)설립유치원 설립안을 수정·의결했다. 일반학급을 줄이고 특수학급을 증가시키는 수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25일 교육위에 따르면 익산교육지원청이 구)영민초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을 일반 9학급, 특수 3학급을 일반 및 특수 6학급씩으로 수정·의결했다.

이날 광점사항은 학급 수의 조정이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공립유치원이니 만큼 특수아동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하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각각 6학급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최인정(군산8) 의원은 "특수학급 확대는 찬성하지만 특수학급이 일반학급과 혼합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수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호영(김제1) 의원은 공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하면 특수학급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위원회 내 의견이 분분하자 양용모(전주8) 위원장이 "단설유치원 학급의 정원이 일반 20~25명, 특수 4명이기 때문에 특수학급을 6학급씩 조정해도 전체 학생 수와 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조정안을 제시해 수정·의결하게 된 것이다.

양 위원장은 "공교육 활성화와 유보통합 차원에서 공립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립 유치원의 원아모집의 어려움도 고려해 일반학급 수도 축소하는 선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합의한 만큼 익산지역 내에서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새누리, 제왕적 총재 부활? 최경환 차대통령 '결단' 뒤집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대표와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과 3차 회동을 갖고 당 내분 사태 봉합은 물론 당 지도체계 개편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들은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의 권한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탈당까지 해가며 얻어낸 정치적 산물이다. 결과적으로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 박 대통령이 만든 집단지도체제를 깨부수는 결정을 내린 셈이다.

2002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부총재는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하며 당 총재직 폐지 및 집단지도체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이회창 총재를 향해, "제왕적 총재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갈수록 없다. 한나라당은 1인 지배 정당을 종식해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렸다"고 직격하며 탈당, 한국미래연합을 만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가 된 후에는 집단지도체제의 '부메랑'을 맞기도 했다. 자신의 독주를 우려하는 반대파들로부터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하라는 똑같은 요구에 직면한 셈이다.

박 대표는 고심 끝에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당권-대권 분리 등 당 혁신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반대파들의 공세를 정면 돌파했다. /이성주 기자

손학규 칩거 끝났나

짖은 나들이에 '정계복귀' 압박 관측 광주→일본→곡성→다음 행선지는?

하지만, 손 고문의 이번 곡성 방문은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8일 5·18 기념식 참석 이후 정계복귀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나들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광주 방문 이후 지난 19일에는 일본 게이오대에서 강연을 했으며, 22일 귀국한 손 고문은 또 다시 24일 곡성행을 택했다.

곡성은 손 고문 사람으로 분류되는 유근기 군수가 특목 튀는 아이디어로 군정을 펼치면서 영화 '곡성(哭聲)'에 못지 않게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다.

이날 만난 사람들도 지지자들이 아닌 전·현직 군의원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다보니 손 고문이 지난 18일 광주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와 심판, 용서와 화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녹여내는 새 판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새판론'을 꺼낸 이후 행보를 봤을 때 사실상 칩거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일본 게이오대 강연에서도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 속에 미래지향적인 정치의 새판을 짜라고 강력히 요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새판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의 외부 나들이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의 심크랭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인 오는 7월 정계 복귀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계복귀의 당위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몸값"을 감안하면 칩거와 외부 나들이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고문의 이 같은 행보가 단순히 기존 여야에 책임당하는 수순이 아닌 '홀로서기'를 위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손 고문의 정계복귀는 시간만 남은 것 같다"면서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당을 택할지 관

심이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듭 새판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고문의 외부 나들이가 앞으로 더 잦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 전 고문의 심크랭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10주년인 오는 7월 정계 복귀 시기를 예측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그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계복귀의 당위성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몸값"을 감안하면 칩거와 외부 나들이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전 고문의 이 같은 행보가 단순히 기존 여야에 책임당하는 수순이 아닌 '홀로서기'를 위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향후 거취를 정하겠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손 고문의 정계복귀는 시간만 남은 것 같다"면서 "더민주, 국민의당 등 여당을 택할지 관

심이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비뺌'하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청와대를 겨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일 잘하는 국회, 정부를 제대로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회를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감시하고 특정한 국정사안을 조사하는 것은 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책적으로 현안조사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걱정을 하루속히 풀어드려야 할

떠나는 정의화, 靑 겨냥 "민주주의 원칙 훼손"

국회법 개정안 논란 관련 "일 잘하는 국회, 정부 감독·견제 국회 원해"

의무가 국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과거의 일부 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부정적 측면만 강조하며 정책 청문회 활성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식의 회피성 주장"이라며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이 서로를 존중하고 예를 갖추는 가운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치권은 지역과 이념의 기득권 질서에 안주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나태 속에 빠져있다"며 "날이 갈수록 국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바라보는 정치, 국익과 민생이 아니라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사로잡힌 정치가 되어가는 것 같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



전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이제 국회를 떠나지만 낡은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열어가는 길에 작은 밑일이 되고자 한다"며 "협치와 연대의 정치개혁, 국민 중심의 정치혁신에 동의하는 우리 사회의 훌륭한 분들과 손을 잡고 정치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빅 텐트'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국민연금 공공투자추진 특위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당내 기구를 만들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은 박광온 의원이 맡았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 11월24일까지 6개월간이다. 특위 위원은 기획재정부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안전행정부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맡을 전망이다. 외부전문가도 9명 영입한다.

이재경 당 대변인은 "우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정책을 제시했다"며 "공공투자 정책은 국민연금 기금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국공립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성주 기자

노회찬 "국회법 거부권행사하면 중대국면 돌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원회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정부가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발동해 무산시킨다면 국회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vN '열린아침 김관홍입니다'와 통화에서 "이것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회의를 몇 번 하느냐 어떤 회의를 하느냐 내부에서 합의 해서 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성주 기자